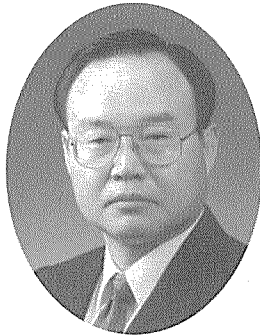


# 신경제를 위한 에너지·자원정책



박재운  
〈통상산업부 장관〉

이 자료는 지난 6월 13일 조선포털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신  
문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전재한 것이  
다.〈편집자註〉

## 1. 에너지·자원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 가. 세계 에너지 정세와 전망

1990년 걸프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자원의 전반적인 정세는 대체로 안정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이러한 기조의 이면에는 커다란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90년 이후 세계 에너지소비는 평균적으로 0.4%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비OPEC 산유국들의 석유공급량 증가에 힘입어 에너지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안요인이 상당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수요 측면에서는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중국, 동구국가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는 국제 석유시장에서 아직도 OPEC과 같은 자원보유국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자원 부족지역의 편재성, 부족량의 유한성 및 생산의 비탄력성 등 본질적인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① 2020년경 지구의 인구는 현재보다 2배가 늘어난 80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수급 패턴에 근본적인 대책이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소비증가의 85% 이상을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21세기의 세계 에너지소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과 인프라 미비, 특히, 석유부문에서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지역적인 에너지 수급과동이 우려된다.

②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66%는 중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OPEC의 12개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 집중도는 76%에 달한다. 또한, 전 세계적인 매장량은 1994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石油은 43년분, 천연

가스는 66년분, 석탄은 235년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개도국 및 구 공산권 국가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고려할때 사용 가능년수는 더욱 단축될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지난 해 겨울 세계적인 이상한파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96년 4월에는 걸프전쟁(91년)이후 최고수준인 배럴당 25.27\$(WTI 油)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장분석 전문가들은 지난 5월 20일 UN-이라크간의 석유수출 재개협상이 타결되고 현재의 국제석유시장이 다소 공급과잉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OPEC이 추가 감산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는 배럴당 1\$정도 하락하여 96평균 국제유가는 Dubai유 기준 15.70\$/B 선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 액화천연가스(LNG)는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수요잠재력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가스전 개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인 공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들은 환경프리미엄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이 반영되는 수준으로 LNG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위적인 가격의 상승은 청정석탄 기술 등 여타 청정연료에 대한 우위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다면 급격한 가격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한편,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94년 3월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세계 에너지수급체계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업계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규제를 받고 있지 않지만 OECD 가입시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유통부문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는 생산·공급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개방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자원산업의 변화의 흐름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국내 여건의 변화 및 전망

세계 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성장·수출·투자 등 모든 면에서 활력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율은 9.0%를 달성하고 수출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24.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설비투자 또한 15.9%에 이르는 신장세를 보였다. 금년 1/4분기에는 경제성장율이 7.9%를 기록하고, 수출도 21.3%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연간성장율이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에너지·자원산업은 93년부터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한자리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너그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 시설은 안전에 취약한 부문으로서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에너지소비가 계속 경제성장을 웃돌고 있으며,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에 있어서 향후 증가할 잠재요인이 크므로, 15년 후인 2010년의 총 에너지수요는 현재의 약

1.9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통신·도로·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국토개발 등으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개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인 국내의 자원개발과 에너지소비절약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③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95년말 현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④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에너지 소비행태가 편의성, 기능성, 청정성 등을 중시하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고품질 에너지로의 수요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환경관련 부담이 증대될 것이다.

⑤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에너지개발정책의 자율적인 추진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지방분권화 및 지역특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권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효율성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님비(NIMB: 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지칭되는 지역이기주의가 확산됨으로써, 발전소·정유시설·석유비축시설·가스배관망 등 에너지공급시설의 지역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2. 96년 에너지·자원정책의 방향

금년도 에너지·자원정책은 과감한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생적인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수급의 안정과 이용효율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원산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지방정부와 상호 협력하여 에너지·자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에너지사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활의 안전이며,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①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점검 위주의 안전관리로부터 모든 기업활동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로 전환하였고, 95년 7월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관련 3법을 개정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시 설계·시공감리제도와 타공사로 인한 배관손상방지제도, 배관안전점검원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통상산업부,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였고, 96년 3월 가스시설공사 및 검사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에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의 내실화와 기술향상을 도모하였다.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97년까지 1단계로 가스배관도의 전산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배관의 부실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시공자에 대하여는 재시공지시 및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가스사고 취약시설에 대해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말 징수시한인 가스안전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통합하여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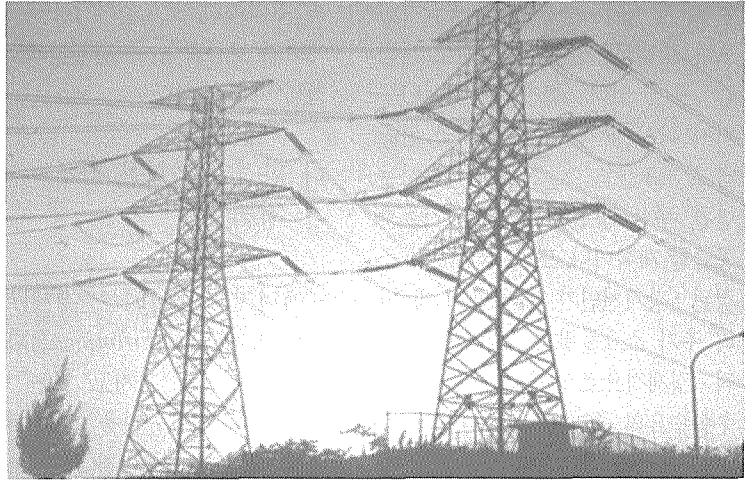
관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의무화와 가스보험제도의 개선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②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수·화력발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발전·송변전시설 등 전기설비도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유흥업소·시장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신력있는 국제전문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 등에 의뢰해서 보다 심도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에너지의 안정공급체제를 공고히 하며, 에너지 이용효율향상 및 수요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① 2020년까지 에너지·자원부문의 「21세기 경제 장기구상」을 확정하고 향후 예상되는 핵심과제에 대한 실천전략과 정책수단을 개발



하며, 에너지수급, 공급시설 확충,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금년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② 80년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전력,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물류비용이 과다해짐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력의 경우 해마다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하절기의 전력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설비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해 95년 12월 확정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설비 등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입지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③ 석유 안전공급을 위해 정유시설·장거리송유관 등 공급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시설도 계속 증설하는 한편,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하여 95년 8월 사우디 등 중동산유국에 대한 순방외교를 전개하였다. 앞으로, 산유국과의 자원외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에너지 기구(IEA)가입을 추진하여 비상시에 선진소비국과 석유를 융통하는 등 에너지소비국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정유시설, 장거리송유관 및 석유비축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④ 천연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해 2000년 이전까지의 추가 소요물량을 인니, 카타르로부터 확보하였고, 전국공급배관망을 계획대로 확충하

여 대전, 대구, 광주 등에 공급하였으며, 평택 및 인천인수기지도 계속 건설중에 있다. 금년에는 평택인수기지 확장 및 인천인수기지를 완공하고, 제3인수기지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부산 창원등에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월 조정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추가 소요물량의 도입선을 안정적·경제적으로 확보하고, 천연가스 수송수요의 증가에 따른 후속 국적선을 적기에 확보하며, 인수기지 및 전국배관망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⑤ 입지·투자재원 등의 제약으로 에너지공급시설을 무한정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수요관리정책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수요관리 기능을 제고하도록 전기, 가스등의 요금을 수요관리형으로 개선하였고, 95년 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사들의 수요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앞으로,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이고 이용효율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절약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육성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술개발

과 투자촉진, 고효율기기보급,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등 지원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

에너지(Energy)는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 3E가 상호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① 우리나라는 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 금년 OECD 가입시 선진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압력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의 후속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국에 포함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95년부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

가보고서」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국가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수급전략을 수립하고, 부문별 실천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②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총에너지의 3%를 태양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하여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문별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③ 석탄·석유 등도 환경보전시설을 갖추고 사용하도록 하면서 청정에너지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천연가스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차량의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장기적으로 에너지사용에 따른 환경관련 비용 부담을 에너지 가격에 포



함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에너지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하여 에너지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줄여 나갈 것이다.

## 라. 국내외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

에너지·자원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발생가능한 에너지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① 급속히 수요가 줄고 있는 국내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감산하면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잉여무연탄의 정부비축과 대체산업 유치 등을 추진하였다. 95년 12월에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금년 4월에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고원관광지 개발과 대체산업 유치 등을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② 「자연적인 자원빈국」에서 「인위적인 자원부국」이 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

도록 95년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미수교국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금년에도 「해외자원개발법」을 개정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원자금의 확대, 지원절차의 간소화 및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 여러가지 지원시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③ 대외경쟁력이 있는 전력산업, 정유산업, 지역난방사업 등 에너지사업도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에너지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마. 지방정부와 협력을 이루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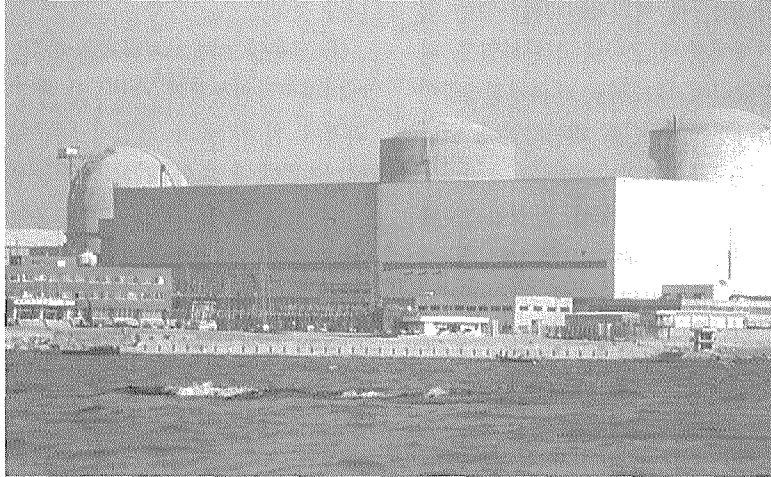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각주의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시설의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정부 차원의 에너지·자원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자원정책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에너지·자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에너지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에너지정책의 수용여건도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에너지·자원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95년 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였고, 95년까지 3개 시·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였다. 금년말까지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중이며, 앞으로 지역에너지정책과제 연구, 정보망구축, 교육·홍보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에너지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고효율기기 및 대체에너지 시범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에 대한 각 지역의 관심과 인식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다.

③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시설의 입지확보와 건설에 애로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의 지역친화력을 높이고 에너



지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가 에너지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바. 경쟁축진을 지향하는 정책

에너지산업이 개방화 추세에 따라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에너지·자원정책도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규제만을 유지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개방과 참여의 확대를 통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① 그동안 석유수급의 안정과 저

렴한 공급을 위해 실시한 석유제품의 최고가격 고시와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제 등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석유산업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하여 석유제품의 가격, 수출입, 석유생산 및 유통시장의 신규진입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95년 12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자유화하기 위한 전단계로 94년 2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였다. 97년부터 국내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전면 자유화하고, 석유 수출입도 자유화하는 동시에, 99년부터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진입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외국인에도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유통구조개선과 석유비축의무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석유사업법시행령 등 관련법령도 정비

해 나갈 것이다.

② 급속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해서는 인수기지 및 전국공급배관망을 계획대로 건설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③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 부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95년 12월 확정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2010년까지 민자발전 사업을 총 15기 635만KW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원자력 사업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대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장기적인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민자발전 180만KW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전기공사업 등에 대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력분야의 규제완화를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다.

### 3. 에너지·자원 업계의 역할

WTO체제가 본격화되고 세계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우리 기업도 남보다 한발 앞서 적응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간에 치열한 경쟁과 협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걸맞는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지방화(Glocalization)시대에서 경쟁을 선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산업인 여러분이 수행할 역할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① 지난 몇년간 발생한 대형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더이상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에너지업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 가스와 전기 등 고압에너지는 사용이 편리한 반면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더이상 국민들이 에너지관련 시설을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에너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자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시설의 입지확보와 투자비의 조달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에너지공급사의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에너지 공급사는 수요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원산업은 국민생활의 기초이자 산업활동의 원동력으로서 공익성이 강하므로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산업평화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자들이 솔선하여 인식을 전환하고 인간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앞당기는 데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한다.

③ 에너지·자원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관심이 높아져, 이제는 에너지·자원 산업인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는 우리의 에너지산업에게 하나의 부담이며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므로, 남보다 먼저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④ 세계화시대의 경쟁에서 우리 에너지·자원산업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에너지·자원산업도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경영혁신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과 세계에너지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에너지·자원산업인 여러분도 세계화를 위해 의식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⑤ 지난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 에너지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에너지·자원산업에 대한 요구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자원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자원산업을 지역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에너지·자원업계가 누구 보다는 많은 기여를 하였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에너지·자원업계가 세계화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세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한 선진대열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